

與, 부동산세 완화 박차... '종부세 9억→12억' 다시 힘받나

김진표 '12억 상향' 언급... 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 '유력'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 무주택자 LTV 90% 완화안 대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

려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도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3일 "재산세 부분은 당정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며 "속도를 내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산세와 아울러 종부세 완화 검토에도 동시 착수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그간 이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위원장 인선에 따른 특위 재가동과 함께 '9억→12억원' 상향 조정이 부상하면서 논의도 다시금 탄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특위 첫 회의에서 '거세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지만 비공개회의에

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위원장이 12억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려면 종부세도 필연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정부도 12억원 상향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안다. 공감대가 알게 모르게 있다"며 "다만 종부세 기준을 올려 잡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종부세 기준 완화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조차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과수요를 불러일으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무주택자의 LTV를 올리더라도 최대 60%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는 특위에서 논의될 테지만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총리 임명 동의안 입장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반년만에 日 총리 만나 "한일관계 지금 같아선 안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전날 오전 도쿄에서 에블린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야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가진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전후로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다, 스가 총리도

박 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박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과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이번 방일 때 약 20년간 '의형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온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전화 회담을 갖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7 재보선 선거비용 152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7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총 152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

보자 19명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총 126억60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6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재보선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14일부터 공개된다. 8월 16일까지 관할 선거위에서 내역과 첨부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가상화폐 투기 범죄 단속 TF팀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3일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연을 빙자한 사기 문제,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했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다"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담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선택은 황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재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 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개 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BBS 라

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검찰 견제"라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백 최고위원은 "검찰 관련 사건을 1호로 했을 때 공수처의 이상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잘 맞는 사건이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KBS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 방침을 겨냥,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5

년간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 취지는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거나, 검찰·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공수처 같은 조직에서 수사 하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 처리를 날로 먹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